

# 지역애착과 정부신뢰의 교차점: 행복의 공간적 맥락 분석\*

유 승 주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시민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 간의 관계에서 지역애착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 및 수도권 거주 여부라는 공간적 맥락 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효과를 형성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정부신뢰의 단선적 효과만을 주목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정서적 유대감과 공간적 정체성에 따른 정부신뢰의 '조건부 효과'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실증분석은 전국 단위 설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부신뢰와 지역애착의 상호작용 효과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정부신뢰와 지역애착은 행복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를 고려한 교차집단 분석에서 조절효과가 특정 조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효과가 심리적 거리감과 일관된 정체성과 같은 공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적 조절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냈으며, 이를 통해 정부신뢰 연구에 심리적·공간적 요인을 통합한 분석틀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부신뢰, 행복, 지역애착, 심리적 거리감

## I. 서론

최근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정부 행정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론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넘어 시민들이 느끼는 정치 효능감, 제도의 지속성은 물론 사회통합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희봉 외, 2003; 김동욱 외, 2022; 고명철·이아람, 2020; 전재우·우지숙, 2023). 나아가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주관적 삶의 질 향상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 부문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단순한 평가지표로 활용될 뿐 아니라, 확장된 차원에서 사회 제도가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사회의 응집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작동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3A2A060 46280).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정부 신뢰가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과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Bargain & Aminjonov, 2020; Gozgor, 2022; Erhardt et al., 2021; Hu et al., 2023).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도 정부신뢰와 주관적 삶의 질이나 행복과 같이 개인의 정서적 측면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배정현, 2014; 김병섭 외, 2015; 김태형 외, 2018; 최예나·최영출, 2020; 유두호 외, 2021; 박지원 외, 2022; Diržytė & Adame, 2024; Meynhardt et al., 2024)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기대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며(배귀휘·임승후, 2009; 이숙중·유희정, 2015; 김정숙·정다정, 2019; 최정윤·유두호, 2021), 이를 통해 시민의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명철, 2018; 송현진·조윤직, 2022). 그러나 정부신뢰가 동일한 작동방식으로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인 영향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심리적 조건, 공간적 맥락 등에 의해 정부신뢰는 시민 개인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정부신뢰는 고정된 효과를 지닌 요인으로 한정되기보다는 특정 조건에 따라 상이한 작동방식을 갖는 '조건적 요인'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작동구조를 해체하여 그 효과를 심리적·공간적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맥락에 주목하였다. 정책이나 제도의 기본 골자는 국가 단위에서 설계되지만, 실제 구현은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시민 개개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를 직접 체감하거나 인지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시민이 해당 지역에 갖고 있는 인식과 애착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즉, 정부신뢰가 발현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수준에 따라 정부신뢰의 효과가 증폭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갖고 있는 정부와의 '심리적 거리감'은 연령, 교육, 경제상황과 같은 개인적 특성만 으론 설명되기 어렵다. 각 개인이 삶의 궤적에서 축적해 온 지역사회 내의 공간적 경험,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민과 정부 간 거리감이 좁혀지고 신뢰가 갖고 있는 효과는 강화될 수 있다. 반면, 공간에 대한 소속감 또는 연대감이 낮거나, 해당 지역과 시민의 정체성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정부를 심리적으로 더 먼 존재로 인식하여 정부신뢰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 개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인과적 관계에서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심리적 거리감과 일관된 정체성과 같은 공간적 맥락이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향과 현 거주지와 일치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와 같은 지역적 정체성과 생활공간의 특성에 따라 조절효과의 방향과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의 효과가 단선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조건부 효과임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앞서 설정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신뢰는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애착은 정부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셋째, 지역애착의 조절효과는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논증을 통해 정부신뢰의 작동조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넓히고, 시민의 정서적·공간적 경험을 고려한 정책의 설계와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용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정부신뢰와 행복

최근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집중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신뢰 기반이 약화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관찰되면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뿐 아니라 제도의 정당성 및 정부 성과 등 공공부문 관리 분야 요소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향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Yang & Holzer, 2006; Christensen & Læg Reid, 2005; Van Ryzin, 2007; Zhang et al., 2022; OECD, 2024). 또한 시민들의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 평가수단이 고도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정치적 태도나 인식을 넘어 정책 그 자체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거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Bouckaert et al., 2005; 김현구 외, 2009; 이대웅 외, 2018).

이렇듯 정부신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거나, 정부신뢰가 정부의 성과나 행태에 미치는 여러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Vigoda, & Yuval, 2003; Mizrahi et al., 2009; Kim, 2010; Zhang et al., 2022).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정부신뢰가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 또한 이어지고 있다(Hudson, 2006; Böhnke, 2008; 고명철, 2018; 최예나·최영출, 2020; 유두호 외, 2021).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정부는 시민과 밀접하여 생애 여러 주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때론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주체로서 전반적인 생활양식은 물론 개인의 정서적 영역까지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시민의 주관적 행복이라는 이질적 개념요소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정부신뢰(government trust)는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부나 정책 또는 그 산하 기관이나 공직자 등 정부 전반에 가지는 신뢰수준을 의미한다(Nye et al., 1997; 서문기, 2001; Goodsell, 2006; Kim, 2005; 박정호, 2014; 황창호 외, 2015).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 정책의 일관된 집행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는 각종 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 등이 존재한다(Stokes, 1962; Hetherington, 1998; Rousseau et al., 1998; Chanley et al., 2001; Van de Walle & Bouckaert, 2003; Grimmlikhuijsen et al., 2013).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응집력과 시민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 공공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Newton & Norris, 2000; Diržytė & Adame, 2024; Meynhardt et al., 2024).

이어서 행복(happiness)은 사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nd). 심리학 분야에서는 행복의 모호한 개념 정의를 보완하고, 경험적 연구를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Argyle, 2001; 성보훈·윤선아, 2010). OECD의 경우 행복을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하위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life evaluation)와 일상속에 체험하는 감정적 상태(affect), 삶의 의미 인식(eudimonia) 등 주관적 웰빙의 포괄적 스펙트럼 안에서 주로 긍정적 정서(positive effect)와 관련된 감정적 상태(emotional states)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3).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행복을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감성적·정서적 요소로 간주하여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신뢰와 시민의 정서·심리상태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부신뢰가 정서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통합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Christensen & Laegreid, 2005; Yang & Holzer, 2006; Ma & Christensen, 2019; Fan et al., 2022; 윤건·서정욱, 2016; 유란희·이태형, 2020). 이는 정부신뢰가 제도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행복을 구성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지역애착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 가능성

정부신뢰의 발동조건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신뢰의 효과는 각 개인이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나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질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Hetherington & Husser(2012)의 연구는 개인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태도와 제도에 대한 경험 여부에 따라 정부신뢰가 정책 지지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신뢰의 형성과 그 효과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질적 수준, 정치적 태도, 인구통계학적 요소 외에 시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 양태를 보인다(Bouckaert & Van de Walle, 2003; Christensen & Lægred, 2005).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보여주는 여러 특성 중 개인이 처한 심리적·공간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자 한다. 이 가운데 거주지역에 따라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의 존재 가능성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적 신뢰 형성에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 개인이 지역에 갖고 있는 긍정적 감정이나 소속감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이 특정 지역에 갖는 정서적 유대감의 구체적 형태로 '지역애착(place attachment)'에 주목한다. 지역애착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소속감, 애정 등의 포괄적 개념으로,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축되는 심리적 관계를 의미한다(Altman & Low, 1992; Giuliani & Feldman, 1993; Raymond et al., 2010; 안치순, 2022). 이는 공간에 대한 단순한 선호 이상의 공동체 소속감 및 참여 의지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삶의 만족감이나 개인의 정체성 정립에도 영향을 미친다(Crum & Ferrari, 2019; Escalera-Reyes, 2020; Zahnow, 2024; 송정애·조금량, 2014; 엄영호·엄광호, 2017; 김기현·김영춘, 2018; 김새봄 외, 2020).

지역애착은 일종의 심리적 자원으로 개인을 둘러싼 내외적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지역에 대한 높은 애착심은 정부 정책과 제도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적 맥락으로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정서적 연결성을 상징하는 맥락적 특성으로서 정부신뢰의 조건적 발휘의 한 동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신뢰의 효과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사회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달리 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보면, 정부에 대한 정서적 인식과 공간적 체험을 상징하는 지역애착 개념은 정부신뢰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 비교적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지역애착 개념은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해석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과도 부합된다. 이에 따르면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평가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2010).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그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며, 더 높은 정서적 관계성을 보인다(Wakslak et al., 2006; 김경욱, 2010; 이자명, 2015). 만일 정부를 '심리적으로 가까운 존재'로 인식할 경우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개인의 삶과 정서적 안정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이때 지역애착이 정부와 개인의 심리적 근접성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애착이라는 맥락적 특성이 정부신뢰와 주관적 웰빙, 즉 행복 간의 관계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조건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말해 지역애착이 정부신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때론 약화시키는 조절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신뢰가 정서적으로 체감되는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예컨대 Payton et al.(2005)의 연구에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지역애착을 매개로 하여 시민행동(civil action)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ong et al.(2019)의 연구 또한 지역애착과 지방정부 신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적 시민행동, 환경 정책에 대한 옹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혀냈다. 나아가 Ramkissoon et al.(2025)는 연구는 지역애착이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지역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지역적 맥락에 따른 정부신뢰의 조건부 효과는 지역과 개인의 보다 구체적인 관계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출신 고향과 현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오랜 거주 경험에 의해 보다 장기적이고 공고한 정체성이 정립되어 높은 지역애착 수준을 보일 수 있고(Trabka, 2022; He et al., 2023), 이는 곧 정부신뢰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 거주지가 수도권 같이 혼합된 정체성이 일반화된 공간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정체성이 다소 약하게 발현될 수 있으며(Chen & Lin, 2016), 이는 정부신뢰의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현 거주지와 고향의 일치 여부, 그리고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하위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가설 2-1: 고향과 현재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지역애착은 정부신뢰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가설 2-2: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애착은 정부신뢰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할 것이다.

가설 2-3: 수도권 외 거주자 중 고향과 현재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지역애착은 정부신뢰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지역애착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정부신뢰가 가져오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고향과 거주지 일치 여부에 따른 정체성 맥락, 수도권 거주 여부라는 공간적 맥락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부신뢰 효과의 조건적 발생 가능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 Ⅲ. 연구설계

####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2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SSK 연구팀에서 수행한 「2024년 한국인 인식조사」이다. 본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1,500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의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주요 조사 내용은 건강 상태, 지역 및 계층 정체성, 정당 및 정파적 정체성,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소(성별, 연령, 학력, 소득, 자산, 종교)를 포함하고 있다.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가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양자 간의 관계에서 지역애착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애착의 조절효과가 공간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분석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Happiness_i = \beta_0 + \beta_1 Trust_i + \beta_2 Attach_i + \beta_3 (Trust_i \times Attach_i) + \gamma' Controls_i + \epsilon_i$$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정부신뢰 및 지역애착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여 개별적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조절효과의 존재여부도 함께 확인하였다. 그다음 고향-거주지 일치여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 여부에 따른 하위집단\*을 각각 구성하여 조절효과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와 수도권 여부를 교차한 네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적 맥락 하에서 상호작용항의 조건부 효과가 어떻게 분기될 수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모든 연속형 변수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변수 간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계수 추정의 불안정성과 과적합(overfitting) 위험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총, 1,5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 중 남성이 50.6%, 여성이 49.4%로 남성 응답자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연령은 20대 18.6%, 30대 14.6%, 40대 20.47%, 50대 20.8%, 60대 이상이 25.53%로 전 연령대 중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0.53%, 중학교 졸업 1.2%, 고등학교 졸업 17.73%, 전문대 졸업 15.6%, 대학교 졸업 55.27%, 대학원 졸업 9.67%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학교 졸업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응답자의 중위소득이 400~499만원에 속해있다. 종교는 61.2%가 종교가 없었고, 38.8%만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념은 진보 22.93%, 중도 44.33%, 보수 28.93%, 모름 3.8%로 중도층에 속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특성	구분	응답자	
		빈도	비율(%)
성별	남성	759	50.60
	여성	741	49.40

\* 전체 응답자 샘플 1,500명 중 고향-거주지 일치자는 총 1,042명(69.5%), 불일치자는 458명(30.5%)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총 694명(46.3%)이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806명(53.7%)이다.

\*\* ① 고향-거주지 일치이면서 수도권 거주 400명(26.7%), ② 고향-거주지 불일치이면서 수도권 거주 294명(19.6%), ③ 고향-거주지 일치이면서 비수도권 거주 642명(42.8%), ④ 고향-거주지 불일치이면서 비수도권 거주 164명(10.9%)이다.

나이	20대	279	18.60
	30대	219	14.60
	40대	307	20.47
	50대	312	20.80
	60대 이상	383	25.53
학력	초졸	8	0.53
	중졸	18	1.20
	고졸	266	17.73
	전문대	234	15.60
	4년제	829	55.27
	대학원	145	9.6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6	5.07
	100~199만원	82	5.47
	200~299만원	212	14.13
	300~399만원	207	13.80
	400~499만원	224	14.93
	500~599만원	191	12.73
	600~699만원	128	8.53
	700~799만원	141	9.40
	800~899만원	91	6.07
	900~999만원	45	3.00
	1,000만원 이상	103	6.87
종교	없음	918	61.20
	있음	582	38.80
정치이념	진보	344	22.93
	중도	665	44.33
	보수	434	28.93
	모름	57	3.80

##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이다. 주요 독립변수는 정부신뢰이며, 지역애착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였다. 종속변수에 미치는 여러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종속변수 ‘행복’은 다음의 문항을 바탕으로 조작화하였다. 「2024년 한국인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선생님께서서는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0점(전혀 행복하지 않다)부터 10점(매우 행복하다)까지의 Likert 11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해당 문항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널리 활용되는 ‘행복’의 대표적 측정 방식 중 하나이다. 실제 분석모형에서는 해당 문항을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정부신뢰’는 “선생님께서서는 중앙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0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신뢰한다)까지의 Likert 11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절변수인 ‘지역애착’의 경우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나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이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생님께서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4점(매우 중요하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응답자 개인과 현재 거주지역 간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 분석에는 이를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는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성별은 여성(1), 남성(0)으로 이분화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고, 나이는 응답자의 실질 연령을 연속형 변수화하여 포함하였다. 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초졸 이하(1)에서 대학원 졸업(6)까지 6단계의 순서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원 미만(1)에서부터 1,000만 원 이상(11)까지 11단계의 구간으로 측정하였다. 종교 유무는 종교 있음(1), 없음(0)으로 이분화하여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치이념은 진보(1), 중도(2), 보수(3), 모름(4)으로 분류된 명목형 변수로 구성되었다.

〈표 2〉 변수의 설정

변수명		질문	측정
종속 변수	행복	선생님께서서는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Likert 11
독립 변수	정부신뢰	선생님께서서는 중앙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0, 보통=5, 매우 신뢰한다=10)	Likert 11
조절 변수	지역애착	선생님께서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1, 중요하지 않다=2, 중요하다=3, 매우 중요하다=4)	Likert 4
통제 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여자=1, 남자=0)	Dummy (0,1)
	나이	응답자의 나이	-
	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 (초졸이하=1, 중졸=2, 고졸=3, 전문대=4, 4년제 대학=5, 대학원=6)	-
	가구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1, 100~199만 원=2, 200~299만 원=3, 300~399만 원=4, 400~499만 원=5, 500~599만 원=6, 600~699만 원=7, 700~799만 원=8, 800~899만 원=9, 900~999만 원=10, 1,000만 원 이상=11)	-
	음주	응답자의 음주 빈도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1, 한 달에 1번 미만=2, 한 달에 1번 정도=3, 한 달에 2~4번=4, 일주일에 2~3번 정도=5, 일주일에 4번 이상=6)	-
	흡연	응답자의 흡연 빈도 (최근 1년간 전혀 피우지 않았다=1, 한 달에 20개비(1갑) 미만=2, 일주일에 20개비(1갑) 정도=3, 일주일에 40개비(2갑) 정도=4, 일주일에 60개비(3갑) 정도=5, 하루에 20개비(1갑) 이상=6)	-

종교	응답자의 종교 여부(있음=1, 없음=0)	Dummy (0, 1)
정치이념	응답자의 정치이념(진보=1, 중도=2, 보수=3, 모름=4)	-

## IV. 분석결과

### 1.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행복의 경우 그 평균값이 5.62로 나타났다. 행복 변수가 최소 0점에서 최대 10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2.07로서 응답자 간 행복 수준에 일정 수준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독립변수인 정부신뢰는 평균이 3.85, 표준편차가 2.41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가 0부터 10까지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다소 낮고, 더불어 응답자 간의 인식 차이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변수인 지역애착은 평균이 2.47로 4점 척도의 중간값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행복	5.6207	2.069	0	10
정부신뢰	3.8513	2.4072	0	10
지역애착	2.4673	0.8173	1	4
성별	0.4940	0.5001	0	1
나이	47.0013	14.6847	18	85
학력	4.5287	0.9663	1	6
가구소득	5.5973	2.6761	1	11
음주	3.0433	1.5821	1	6
흡연	1.9293	1.5969	1	6
종교	0.388	0.4875	0	1
정치이념	진보:344(22.9%), 중도:665(44.3%), 보수:434(28.9%), 모름:57(3.8%)			

주 1) Number of obs=1,500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아래의 <표 4>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정부신뢰, 지역애착, 학력, 가구소득, 흡연 빈도, 종교 등이 있다. 이중 흡연 빈도만이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나머지 변수들은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고 지역애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신뢰는 지역애착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의 활용 가능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밖에 응답자의 나이와 정치이념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조절변수인 지역애착은 학력, 가구소득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수 간의 상관성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도 1.21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도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1.000										
②	0.2456*	1.000									
③	0.1727*	0.1930*	1.000								
④	-0.0154	-0.0271	-0.0037	1.000							
⑤	0.0597	0.0708*	0.0560	-0.0457	1.000						
⑥	0.1634*	0.0077	0.0772*	-0.1225*	-0.1141*	1.000					
⑦	0.2631*	0.0066	0.0815*	-0.0616	-0.0142	0.2464*	1.000				
⑧	0.0285	-0.0169	0.0251	-0.2345*	-0.0789*	0.1019*	0.2105*	1.000			
⑨	-0.0766*	-0.0288	0.0202	-0.2879*	-0.0009	0.0623	0.1252*	0.3814*	1.000		
⑩	0.1216*	0.0600	0.0636	-0.0014	0.1941*	0.0543	0.0585	-0.0832*	0.0155	1.000	
⑪	0.0377	0.2015*	0.0350	-0.0327	-0.0338	-0.0400	0.0130	-0.0077	-0.0236	0.0133	1.000

주 1) Number of obs=1,500

2)  $p^* < 0.01$

3) ①행복, ②정부신뢰, ③지역애착, ④성별, ⑤나이, ⑥학력, ⑦가구소득, ⑧음주, ⑨흡연, ⑩종교, ⑪정치이념

## 2.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은 앞서 설정한 가설에 따라 정부신뢰, 지역애착, 그리고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하위집단을 각기 구성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와 수도권 거주 여부를 교차하여 각기 다른 네 개의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네 집단별로 개별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의 분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1) 전체 표본 분석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제외하고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 학력, 가구소득, 흡연, 종교, 정치이념(보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됐다. 특히 흡연 빈도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흡연 빈도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 수준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학력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독립 및 조절변수, 그리고 이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전체 모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독립 및 조절변수 각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확인됐다. 즉, 정부신뢰와 지역애착이 행복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착 수준이 강할수록 행복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정부신뢰와 지역애착의 상호작용항에선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아,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지역애착이 정부신뢰의 효과를 조절한다고 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정부신뢰의 효과는 행복에 단일한 영향을 미칠 뿐 지역애착의 높고 낮음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표 5〉 회귀분석결과 : 전체 표본 대상

변수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정부신뢰			0.1773***	0.0215	
거주애착			0.2453***	0.0617	
정부신뢰×거주애착			0.0111	0.0237	
성별	-0.0290	0.1076	-0.0285	0.1043	
나이	0.0069	0.0036	0.0046	0.0035	
학력	0.2261***	0.0549	0.2074***	0.0532	
가구소득	0.1855***	0.0199	0.1810***	0.0193	
음주	0.0263	0.0357	0.0272	0.0346	
흡연	-0.1689***	0.0351	-0.1607***	0.0341	
종교	0.3582**	0.1068	0.3185**	0.1036	
정치이념	중도	-0.0091	0.1298	-0.0669	0.1268
	보수	0.3829**	0.1413	0.0810	0.1409
	모름	-0.5062	0.2833	-0.5716*	0.2750
상수항	5.4085***	0.1250	5.5349***	0.1225	
Number of obs	1,500		1,500		
F	19.76***		23.94***		
R <sup>2</sup>	0.1172		0.1732		
Adj-R <sup>2</sup>	0.1112		0.1659		

주 1) p\* < 0.05, p\*\* < 0.01, p\*\*\* < 0.001

2) '정치이념' 변수의 기준범주(reference group)는 진보임

## 2) 하위집단 분석

### (1) 고향-거주지 및 수도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공간적 맥락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 수도권 여부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아래의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고향과 현재 거주지가 일치하는 집단에서 정부신뢰×지역애착 상호작용항이 정(+)의 방

향으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향과 현재 거주지가 일치할 경우, 해당 지역은 단순한 거주지나 출신지역을 넘어 개인의 삶의 궤적과 정체성이 축적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출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되고 현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 애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체성에 대한 높은 지속성과 안전성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이면서, 정부를 보다 구체적이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서적·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지적 기반의 형성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의 수용성과 효능감이 상승하게 된다. 다시 말해, 높아진 심리적 근접성이 바로 정부신뢰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핵심적 동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고향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집단에선 정부신뢰와 지역애착의 상호작용항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현재 거주지와 태어난 고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확대된다. 즉, 현재 거주지와 고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삶의 일부가 축적된 장소(고향)와 물리적 공간(현재 거주지) 사이에 정체성 단절이 존재하여 지역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내면화되기 어렵다. 거주지에 대한 낮은 유대감과 정체성 혼란은 그 공간을 매개로 한 각종 정부 정책과 서비스 역시도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개인 사이에 형성된 높은 심리적 거리감은 정부신뢰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그 효과마저 단절시키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신뢰에 따른 지역애착의 조절효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 1>을 제시하였다. 고향과 현 거주지가 일치하는 집단에서 지역애착이 낮은 경우(-1SD) 보다 지역애착이 높은 경우(+1SD)에 정부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고향과 현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집단에선 지역애착 수준이 낮은 경우(-1SD) 정부신뢰 하락에 따른 행복의 감소 효과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 수도권 거주집단 및 비거주 집단 모두에서 정부신뢰와 지역애착의 단일 변수는 모두 행복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단순한 지역적 구분만으로 정부신뢰의 조절기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도권·비수도권의 여부는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을 포착하는 구분점으로 유의성이 있으나, 개인이 인지하는 심리적 거리감이나 정체성의 축적을 상징하는 기준은 아니다. 동일한 수도권 거주자 또는 비수도권 거주자라 할지라도 고향과 거주지의 관계성에 따라 정부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의 형성은 단순한 지역적 구분에 의존하지 않고, 고향과 거주지의 정체성 일치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 회귀분석결과 II : 하위집단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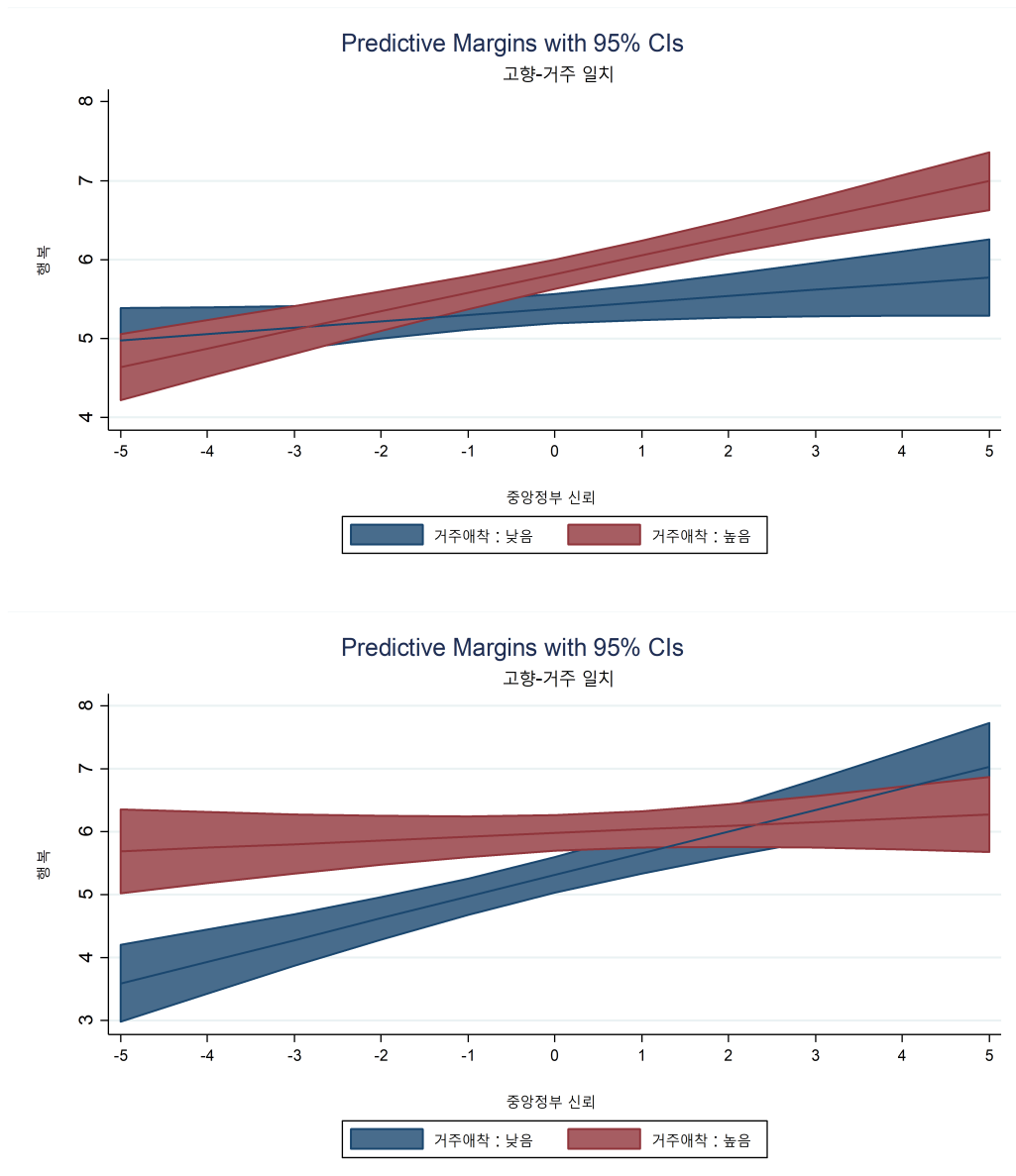
변수	고향-거주 일치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일치	불일치	거주	비거주	
정부신뢰	0.1578*** (0.02600)	0.2017*** (0.0381)	0.2106*** (0.0316)	0.1435*** (0.0294)	
지역애착	0.2197** (0.0744)	0.3336** (0.1120)	0.2653** (0.0886)	0.2025* (0.0865)	
정부신뢰×지역애착	0.0780** (0.0281)	-0.1431** (0.0447)	0.0289 (0.0343)	-0.0296 (0.0338)	
성별	-0.1245 (0.1235)	0.1599 (0.1941)	0.0093 (0.1544)	-0.0491 (0.1419)	
나이	0.0081 (0.0042)	-0.0016 (0.0065)	-0.0024 (0.0052)	0.0118* (0.0047)	
학력	0.2067** (0.0638)	0.2023* (0.0962)	0.1798* (0.0805)	0.2347** (0.0706)	
가구소득	0.1743*** (0.0230)	0.1985*** (0.0353)	0.1224*** (0.0286)	0.2344*** (0.0264)	
음주	0.0500 (0.0409)	-0.0374 (0.0650)	-0.0092 (0.0515)	0.0605 (0.0467)	
흡연	-0.2053*** (0.0407)	-0.0846 (0.0627)	-0.0608 (0.0494)	-0.2470*** (0.0468)	
종교	0.3312** (0.1234)	0.2987 (0.1928)	0.4687** (0.1574)	0.1589 (0.1384)	
정치이념	중도	0.0444 (0.1548)	-0.1261 (0.2251)	-0.2438 (0.1859)	0.1120 (0.1727)
	보수	0.2329 (0.1718)	-0.1039 (0.2549)	-0.0946 (0.2083)	0.2330 (0.1911)
	모름	-0.6150 (0.3237)	-0.5012 (0.5194)	-1.0543** (0.4003)	-0.1359 (0.3771)
상수항	5.4874*** (0.1531)	5.5411*** (0.2055)	5.6106*** (0.1787)	5.5092*** (0.1701)	
Number of obs	1,042	458	694	806	
F	17.56***	8.65***	10.62***	15.64***	
R <sup>2</sup>	0.1817	0.2020	0.1687	0.2043	
Adj-R <sup>2</sup>	0.1714	0.1787	0.1528	0.1912	

주 1) 괄호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2) p\* < 0.05, p\*\* < 0.01, p\*\*\* < 0.001

3) '정치이념' 변수의 기준범주(reference group)는 진보임

〈그림 1〉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그래프



주 1) 지역애착의 높고 낮음은 거주애착 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 $\pm 1SD$ )' 만큼 크거나 혹은 작을 경우로 구분하였음

(2) 고향-거주지 일치와 수도권 거주 여부의 결합조건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와 수도권 거주 여부를 교차하여 네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정부신뢰 및 지역애착의 상호작용항은 구분된 네 집단에 따라 각각 다른 효과를 나타냈다. 고향과 거주지가 일치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고향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가 발생했다. 나머지 고향-거주지 일치 및 비수도권 집단, 고향-거주지 불일치 및 수도권 거주집단에선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의 효과가 단순히 지역적 구분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와 같은 심리적 요인과 공간적 특성이 함께 결합하였을 때 상이한 조절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향-거주지가 일치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권이라는 혼합적 공간에서 고향 내 정체성의 오랜 축적이 정부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궁극적으로 정부신뢰의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고향-거주지가 불일치하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의 경우는 비교적 지역 정체성이 강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향-거주지의 불일치가 정부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오히려 정부신뢰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정부신뢰의 효과는 단선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과 공간적 맥락에 따라 다층적인 조절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때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는 정부를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으로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전제 조건이며, 이는 다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이라는 물리적 공간 조건과 결합되어 정부신뢰의 상반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표 7〉 회귀분석결과 III: 고향-거주지 일치×수도권 거주여부

변수	고향-거주 일치× 수도권 거주	고향-거주 불일치× 수도권 거주	고향-거주 일치× 수도권 비거주	고향-거주 불일치× 수도권 비거주	
정부신뢰	0.2037*** (0.0430)	0.2058*** (0.0475)	0.1225*** (0.0329)	0.1662* (0.0698)	
지역애착	0.1557 (0.1188)	0.4249** (0.1362)	0.2383* (0.0959)	0.1309 (0.2042)	
정부신뢰×지역애착	0.1280** (0.0451)	-0.1042 (0.0538)	0.0196 (0.0367)	-0.2543** (0.0884)	
성별	0.0218 (0.2029)	0.0600 (0.2392)	-0.1587 (0.1554)	0.4150 (0.3538)	
나이	0.0007 (0.0071)	-0.0026 (0.0084)	0.0148** (0.0052)	0.0034 (0.0113)	
학력	0.1851 (0.1118)	0.1878 (0.1171)	0.2339** (0.0770)	0.2499 (0.1761)	
가구소득	0.0898* (0.0387)	0.1702*** (0.0430)	0.2243*** (0.0290)	0.2516*** (0.0640)	
음주	0.0158 (0.0680)	-0.0565 (0.0791)	0.0690 (0.0510)	0.0126 (0.1178)	
흡연	-0.0703 (0.0666)	-0.0502 (0.0750)	-0.2830*** (0.0509)	-0.1297 (0.1182)	
종교	0.6951** (0.2115)	0.2105 (0.2397)	0.1260 (0.1521)	0.3833 (0.3467)	
정치 이념	중도	-0.1357 (0.2592)	-0.2348 (0.2751)	0.1737 (0.1908)	0.1293 (0.4099)
	보수	-0.0260 (0.2888)	-0.0112 (0.3102)	0.3663 (0.2115)	-0.2963 (0.4648)
	모름	-1.3914** (0.4884)	-0.2704 (0.7214)	0.0625 (0.4320)	-0.7616 (0.7934)

상수항	5.5220*** (0.2598)	5.5949*** (0.2499)	5.4790*** (0.1893)	5.4669*** (0.3902)
Number of obs	400	294	642	164
F	7.19***	4.98***	12.81***	4.14***
R <sup>2</sup>	0.1949	0.1877	0.2095	0.2639
Adj-R <sup>2</sup>	0.1678	0.1500	0.1932	0.2002

주 1) 괄호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2) p\* < 0.05, p\*\* < 0.01, p\*\*\* < 0.001

3) '정치이념' 변수의 기준범주(reference group)는 진보임

## V. 결론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여 정부신뢰가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지역애착이라는 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특히,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와 수도권 거주 여부라는 지역 정체성 맥락과 공간적 맥락이 정부신뢰와 지역애착의 상호작용 효과를 어떻게 분기시키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정부신뢰의 효과가 단일하고 고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효과'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이다.

분석결과, 정부신뢰와 지역애착은 각각 시민의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와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특정한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발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고향과 거주지가 일치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지역애착이 정부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고향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에선 지역애착이 정부신뢰의 긍정적 효과를 오히려 억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신뢰의 효과가 단일한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역에 대해 체화되어 있는 정서적 거리감과 공간적 맥락에 따라 다층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공간 자체의 특성보단 개인의 공간적 경험과 그 안에서 형성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의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은 정부신뢰의 효과가 지역애착이라는 심리적 변수와 고향-거주지 일치 여부 및 수도권이라는 공간적 맥락에 의해 구성되는 '이중적 조절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있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통용되는 해석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과도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반응은 그 대상과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를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적용함으로써, 정부를 얼마나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조성될수록 정부신뢰의 효과 또한 강화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신뢰 연구에 있어서 심리적·공간적 요인의 통

합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정책적 함의로는 정부 정책과 제도의 설계, 그리고 신뢰도 제고 전략 구상에 있어서 지역에 대해 각 개인이 보유한 정체성과 공간적 경험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특히 지역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과 이주 경험이 정책 수용성과 행복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 시 일률적인 서비스 전달 보단, 삶의 공간을 고려한 맥락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같이 이주와 정체성 혼재가 일반화된 공간에선 성과 정보 중심의 신뢰도 제고 전략처럼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메시지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지역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정체성 통합 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위와 같이 문화적·정서적 기반의 접근을 통해 정부신뢰의 실질적 향상과 더불어 시민의 행복 증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8〉 지역 정체성 및 공간적 맥락에 따른 조절효과(정부신뢰×지역애착)의 유형과 정책적 함의

구분	조절효과의 방향성 및 유의성	해석	정책적 함의
고향-거주 일치 & 수도권	정(+의) 조절효과(강화)	정체성 일관성이 유지된 집단에서는 정부신뢰가 더욱 강하게 작동	중앙정부와의 연계 정책에서 정체성 고착 집단을 전략 대상으로 고려 필요
고향-거주 일치 & 비수도권	없음	정부신뢰의 영향이 지역적 경험에 의해 내면화됨	정부신뢰는 '배경 조건'처럼 안정적 작동, 지역 기반 정책 연계 가능
고향-거주 불일치 & 비수도권	부(-의) 조절효과(억제)	이주에 따른 정체성 혼재와 심리적 거리감 확대	정체성 통합 기반의 신뢰 제고 전략 필요
고향-거주 불일치 & 수도권	없음	정체성 혼합과 유동성이 일반적인 공간	정보 제공 및 성과 중심의 정부 신뢰 강화 전략 필요

위와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횡단적 자료 분석의 특성상 시간 변화에 따른 정부신뢰와 행복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정부신뢰 변수의 측정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로 한정 지어, 지방정부나 여러 공공부문, 특정 제도나 정책 분야에 대한 신뢰의 차별적 효과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연구의 분석단위 설정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개인을 둘러싼 지역적 맥락을 모형에 일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는 개인과 지역 수준의 맥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기되는 정부신뢰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애착이라는 정서적 개념은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심리를 심층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한 분석 틀과 측정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정부신뢰 연구의 정서적·인지적 맥락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명철. (2018).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신뢰에 의한 지역 사회 생활의 질 (community QoL) 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19-146.
- 고명철·이아람. (2020). 정부신뢰 및 정치적 효능감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99-122.
- 국립국어원. (nd). 행복.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6%89%EB%B3%B5>에서. 2025년 6월 5일에 검색함.
- 김경욱. (2010).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이 대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해석수준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659-678.
- 김기현·김영춘. (2018). 지역 애착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3), 823-836.
- 김동욱·장근호·조민호·이숙중. (2022). 사회 공정성 인식이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대국민 소통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7(3), 1-33.
- 김병섭·최성주·최은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 김새봄·김진현·송영지. (2020). 고령친화 환경인식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지역사회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5, 57-82.
- 김정숙·정다정. (2019).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1), 67-92.
- 김정숙·황창호. (2021). 행정이념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2), 283-307.
- 김태형·김한빛·문명재. (2019).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16(2), 1-36.
- 김태형·최정인·정세희·문명재. (2018).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2(1), 281-306.
- 김현구·이승중·최도림. (2009).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 분석. 「행정논총」, 47(3), 1-24.
- 박정호. (2014). 지방정부의 정보제공이 신뢰와 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291-313.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7.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선호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61-92.
-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7-270.

-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5), 119-146.
- 성보훈·윤선아. (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 103-134.
- 송정애·조금량. (2014). 지역주민의 가정건강성이 지역사회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2), 188-210.
- 송현진·조윤직. (2022). 코로나 19 경험과 정부지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대 간 차별화된 영향력의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1), 119-149.
- 엄영호·엄광호. (2017).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2), 145-169.
- 유두호·엄영호·윤선일. (2021). 정부의 공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부혁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4), 297-319.
- 유란희·이태형. (2020). 국가와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시키는가?: 정부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4(2), 309-338.
- 윤건·서정욱. (2016). 사회통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3(3), 21-44.
- 이대웅·손주희·권기현. (2018). 정부신뢰가 위험인식과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2(1), 229-257.
- 이숙중·유희정. (201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 53-81.
- 이자명. (2015).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여성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 생성 차이: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59-673.
- 전재우·우지숙. (2023). 정부-국민 소통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치 성향과 정치효능감의 조절 효과. 「행정논총」, 61(4), 1-29.
- 최예나·최영출. (2020).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공가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4(3), 325-352.
- 최정윤·유두호. (2021). 지방정부 신뢰의 결정요인: 지역변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40(2), 35-71.
- 황창호·김영주·문명재. (2015).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4), 123-150.
- Altman, I., & Low, S. (1992). *Place attachment: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Vol. 12)*. New York.
- Argyle, M. (2013). *The psychology of happiness*. Routledge.
- Bargain, O., & Aminjonov, U. (2020). Trust and compliance to public health policies in times of COVID-19.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2, 104316.
- Böhnke, P. (2008). Does society matter? Life satisfaction in the enlarged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 189-210.
- Bouckaert, G., & Van de Walle, S. (2003).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and

- satisfaction indicator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69(3), 329-343.
- Bouckaert, G., Van de Walle, S., & Kampen, J. K. (2005). Potential for comparative public opinion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1(2), 229-240.
- Chanley, V. A., Rudolph, T. J., & Rahn, W. M. (2001).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the Reagan years and beyond. In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pp. 5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D. R., & Lin, Y. C. (2016). Social identity, perceived urban neighborhood quality, and physical inactivity: A comparison study of China, Taiwan, and South Korea. *Health & Place*, 41, 1-10.
- Christensen, T., & Lægreid, P. (2005). Trust in gover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4), 487-511.
- Crum, K. P., & Ferrari, J. R. (2019). Psychological home, clutter, and place attachment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women of color: Home is beyond physical space.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in Social Sciences*, 1(4), 87-96.
- Diržytė, A., Patapas, A., & Adame, K. (2024). Unlocking the links between political and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insights from the 11th European social survey.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3(4), 457-474.
- Erhardt, J., Freitag, M., Filsinger, M., & Wamsler, S. (2021). The emotional foundations of political support: How fear and anger affect trust in the government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7(2), 339-352.
- Escalera-Reyes, J. (2020). Place attachment, feeling of belonging and collective identity in socio-ecological systems: Study case of Pegalajar (Andalusia-Spain). *Sustainability*, 12(8), 3388.
- Fan, J., Zheng, H., & Liang, W. (2022). How to enhance government trust and social cohesion: evidence from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13, 816019.
- Giuliani, M. V., & Feldman, R. (1993).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al and cultur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3), 267-274.
- Goodsell, C. T. (2006). A new vis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4), 623-635.
- Gozgor, G. (2022). Global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s during the COVID-19.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7(2), 559-578.
- Grimmelikhuisen, S., Porumbescu, G., Hong, B., & Im, T. (2013). The effect of transparency on trust in government: A cross-national comparative experi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4), 575-586.

- He, L., Mao, Y., & Kinoshita, T. (2023). Place attachment among rural migrants and returnees: case of Shuangfeng County,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14, 1279679.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M. J., & Husser, J. A. (2012). How trust matters: The changing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2), 312-325.
- Hu, Y., Huang, Y., Zhang, H., Fang, M., & Chen, G. (2023). Insights from China: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mmunity resilience and government trust in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anxiety during COVID-19.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1298269.
- Hudson, J.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62.
- Kim, S. (2010).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Japan and South Korea: Does the rise of critical citizens matt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5), 801-810.
- Kim, S. E. (2005). The role of trust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An integrative model. *Administration & society*, 37(5), 611-635.
- Kim, S., & Kim, D. (2012). Does government make people happy?: Exploring new research directions for government's roles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5), 875-899.
- Liberman, N., & Trope, Y. (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
- Ma, L., & Christensen, T. (2019). Government trust, social trust, and citizens' risk concerns: Evidence from crisis management in China.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42(2), 383-404.
- Meynhardt, T., Strathoff, P., Bardeli, J., & Brieger, S. (2024). Public administration contributes to happines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 and happiness in Switzer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37(4), 504-530.
- Mizrahi, S., Vigoda-Gadot, E., & Cohen, N. (2009). Trust,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health services in Israel.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3(1), 7-33.
- Newton, K., & Norris, P.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52, 73.
- Nye, J. S., Zelikow, P. D., & King, D. C. (Eds.).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OECD (2024).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2024 Results*.
- Payton, M. A., Fulton, D. C., & Anderson, D. H. (2005).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and trust on civic action: A study at Sherburne National Wildlife Refuge.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8(6), 511-528.
- Ram, R. (2009). Government spending and happiness of the population: additional evidence from large cross-country samples. *Public Choice*, 138, 483-490.
- Ramkissoon, H., Nekmahmud, M., & Mavondo, F. T. (2025). Pathways to Social and Business Sustainability: Place Attachment, Trust in Government, and Quality of Life. *Sustainability*, 17(5), 1901.
- Raymond, C. M., Brown, G., & Weber, D. (2010).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Personal, community, and environmental connec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422-434.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Sapienza, E. (2021).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A conceptual framework and insights for improved governance programming*. Oslo: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Song, Z., Daryanto, A., & Soopramanien, D. (2019). Place attachment, trust and mobility: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n urban residents' environmental citizenship behaviou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05, 168-177.
- Stokes, D. E. (1962). Popular evaluations of government: An empirical assessment. *Ethics and bigness: Scientific, academic, religious, political, and military*, 61-72.
- Trąbka, A., Klimavičiūtė, L., Czeranowska, O., Jonavičienė, D., Grabowska, I., & Wermińska-Wiśnicka, I. (2022). Your heart is where your roots are? Place attachment and belonging among Polish and Lithuanian returnees.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10(1), 29.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
- Van de Walle, S., & Bouckaert, G. (2003). Public servic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problem of caus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8-9), 891-913.
- Van Ryzin, G. G. (2007). Pieces of a puzzle: Linking government performance, citizen satisfaction, and trust.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0(4), 521-535.
- Vigoda, E., & Yuval, F. (2003). Managerial quality, administrativ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ance: Can we point to causality?.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2(3), 12-25.
- Wakslak, C. J., Trope, Y., Liberman, N., & Alony, R. (2006). Seeing the forest when entry is

- unlikely: probability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4), 641.
- Yang, K., & Holzer, M. (2006). The performance—trust link: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114-126.
- Zahnow, R. (2024). Place type or place function: What matters for place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73(3-4), 446-460.
- Zhang, J., Li, H., & Yang, K. (2022). A meta-analysi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trust link: taking cultural and methodological factors into accou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1), 39-58.

---

유승주(劉承周):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구변화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조직이론, 조직혁신, 지방행정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SNS가 흔드는 행복, 정부신뢰가 지켜줄 수 있을까(2025)”, “지방정부와 주민 정신건강: 재정분권의 역할 재조명(2025)”, “지방정부의 출산지원정책 대응의 동태적 분석: 학습(learning)과 모방(imitation)을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sjmyth@hanmail.net).

## Abstract

### The Intersection of Regional Attachment and Government Trust: Analyzing the Spatial Context of Happiness

Yoo, Seung Ju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trust on citizens' subjective happiness and examined how the psychological factor of regional attachmen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sidering the spatial context of whether hometown and current residence coincide, and whether residence is in a metropolitan area.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solely on the linear effect of government trust, this study differs by emphasizing the conditional effect of government trust according to emotional bonds and spatial identity. The empirical analysis employed regression analysis using nationwide survey data,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regional attachment was examined through subgroup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full-sample analysis, both government trust and regional attachment had independent effects on happiness, but the moderating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in the cross-group analysis considering whether hometown and current residence coincided and whether residence was in a metropolitan area, the moderating effect was significant under certain condition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 trust exhibits a 'dual moderating structure' that varies depending on spatial contexts such as psychological distance and identity consistency. Furthermore, it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psychological and spatial factors into government trust research,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government trust, happiness, place attachment, psychological distance